

이슈 파헤치기



### 대법 “산재보상시 소득자료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돼”

“나머지 자료로 근기법상 평균임금 산정해 비교해봐야”

진폐증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응인 및 보험금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옛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5조는 옛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을 결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시 5조 각호는 근로자 평균임금 판단 기준으

로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 임금수준·물가사정, 그 지역 유사 사업장에서 동일직종에 종사한 근로자 임금,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노동통계 등을 제시한다.

재판부는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이 고시 5조 각호를 고려해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 혈세로 ‘거짓 출장’ 광주 북구의회...자정능력도 ‘밑바닥’

20명 중 15명 민주당 독점 의회 “몇마디 사과로 사태 무마”

윤리위도 못 열어 ‘제 식구 감싸기’ 비난...내달 4일 본회의

광주 북구의회가 주민 혈세로 ‘거짓 출장’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기요양약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앞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장기요양약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권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직업안전비용(86.4%) 폐지와 민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개혁, 혈세낭비 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동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소속이나 민중당 의원들의 눈치보기에 대한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윤리위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위 개최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윤리위는 5명의 의원 중 3명이 민주당 소

속으로, 윤리위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앞장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리위가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20명의 의원 중 15명이 민주당에 속해 있는 북구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무소속이나 민중당 의원들 역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윤리위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인 고점례 북구의장은 지난달 8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징계 여부에 따라 구의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 여부도 판단될 것”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6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 김건안 운영

위원장 당직자격정지 3개월, 동행한 북구의원 2명에게는 각각 서면 경고를 의결했다.

당 차원의 징계가 결정된 뒤 최기영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징계 심사안이 확정될 경우 빠른 19일 정례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하며 “고 의장 등 4명에 대해 징계 심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9일 정례회의에서는 징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평도 징계와 관련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당의 징계가 내려진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동료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의

원 수가 월등해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질문을 한 구의원에 대해 당연히 윤리위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고 의장 등 4명의 의원은 몇 마디 사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정당인 이곳 광주의 지방정치 또한 혁신과 쇄신의 대상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의회는 가짜 출장을 다녀온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스스로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까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 구하라 사망 ‘폭행 혐의’ 前 남친 2심 재판에 영향 미칠까

법조계 “인과관계 인정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1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구하라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구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합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의 2심 재판에 구씨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전날 오후 6시19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종이예

지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다. 구씨 자택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된 해당 메모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 관계자는 “신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28)는 지난 8월 1심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4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2심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구씨의 사망이 최씨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어렵지만, 양형에서 최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씨의 사망이 전 남자친구와의 사건이 계기가 됐다던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남친과의 사건으로 생긴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더라도 마한



전 남자친구 최모씨(왼쪽)와 구하라.

가지”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았다”며 “구씨가 다른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건강한 정부, 건강한 생활